

반도체 용수 동북댐 증고·군공항 이전 등 쟁점 부각

■ 특별시의회 시정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반도체 용수 공급에 따른 화순 동북댐 증고,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군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국립의대 공모를 놓고 서남권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으며, 조직개편과 관련한 아랍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도 펼쳐졌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이날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사용권원 인정과 교원 확보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 시장은 “이번 절차는 최종 심사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사업비 증가도 추궁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 지적…국립의대 선정전도

아니라 후보 대학 추천을 위한 평가였으며, 관련 법률 검토 역시 세 차례 진행됐다”며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립의대 설립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 달라”고 반박했다.

국립의대와 관련, 전날에도 최선국 의원이 서남권 의료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남은 시정질문에서도 국립의대 공모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훈 의원 (민주당·목포4)은 서남권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편성과 지급 절차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옛 광주시가 올해 6월 추경에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가 9월로 미뤘고, 9월에 400억원만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재정난으로 전액 삭감했다. 법적 의무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민 시장은 재정 여건 때문에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류기준 의원 (민주당·화순2)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에 따른 화순 동북댐 증고

결정에서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 t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화순 동북댐 15m 증고를 결정하면서 예산 이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개발독재시대 국가폭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보상을 위해 과거에 제정된 토지보상법이나 댐건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현장에 방문했으나 주민들과 대화하지는 못했다. 화순군과 통합특별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만나 필요한 대화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귀순 의원 (민주당·광산4)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반복된 개통 지연과 사업비 증가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토목공사 중심으로 공정을 관리하면서 후속

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민 시장은 공사 지연 경위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솔직히 개통 시기 예측이 쉽지 않다. 책임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 누구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대와 무안공항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정은 의원 (민주당·무안2)은 “광주 군공항이 반도체 산단 부지로 결정되면서 군공항 무안 이전의 3대 선결 조건인 민간공항 선 이전, 1조원 인센티브 지원, 국가산단 조성 중 1조원 예산 마련이 어렵게 됐다”며 “1조원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시장은 “1조원 지원 약속은 옛 광주 시와 정부가 약속한 행정행위인 만큼 통

합특별시가 승계한다”며 “현재 정부와 통합특별시, 반도체 사업주체가 분담 비율을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처리 후 민 시장과 진보당 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제기된 아랍 의혹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연순 의원 (진보당·비례)는 “조직개편안 찬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당론이었다”며 “민행매 시장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생활임금, 반도체 등 주요 정책을 협의했고, 간담회 과정과 결과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윤리 “정치적 거래나 아랍이라는 말을 은근히 사용하면서 의혹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방송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동훈 의원 고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등 관계자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을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재호 “축산자원개발부 ‘합평 이전’ 행정 절차·예산 속도 내야”

3년 지연…이주민 생계대책·상생 예산 책임 이행 당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합평 이전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적 한계에 막힌 이주민 생계대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 연구개발(R&D)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합평군 신광·손불면 일원 178만 평에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사업 기간이 당초 2021~2027년에서 2021~2030년으로 3년 늘었다. 자체비·

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도 7692억원에서 8587억원으로 895억원(11.6%) 증가했다.

이재호 의원은 농진청이 20차례 보상협의를 열어 주민 요구 가운데 수용 불가 안전 비율을 초기 57.9%(19건 중 11건)에서 현재 8.3%(24건 중 2건)로 크게 낮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시계획 인가 접수에 대한 주민 사전 동의를 이끌어낸 것도 농진청 관계자들의 소름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 기간 연장으로 커진 지역사회의 불만을 덜고 지방소멸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남은 공기를 최대한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적 결림 등에 부딪힌 이주민 생계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 이행을 주문했다.

농진청은 당초 자체 생산 원유 일부(10년간 17억원 상당)를 주민에게 기부하려 했으나, 물품관리법 상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국회 증액을 통한 수입대체경비 편성’ 방안과 농진청 내부 적극행진심의,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과

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상생 모델로 두 사업을 제시했다.

합평전지한우 유전자원센터 구축사업(총 60억원)은 2028년 국비 20억원 지원이, 지역주도 한우산업 성장모델 육성 R&D사업(총 50억원)은 2027년 예산 국회 증액 반영이 필요하며, 농진청이 기획부터 예산 반영까지 책임지고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진청이 보여준 소름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남은 공기 단축, 생계대책 대안 성사, 상생 R&D 예산 확보까지 청장이 중심이 돼 마지막까지 자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당원 개인정보 지키고 이중당적은 잡아야”

임문영, 정당법 개정안 발의…당원명부 암호기술 활용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 간 중복 가입을 확인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사진)은 14일 당원명부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암호화된 정보만 대조해 이중당적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원명부를 국가기관 한곳에 모을 경우 유출이나 오·남용에 따른 정치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중당적은 확인하되 당원명부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암호기술로 구현하도록 했다. 핵심은 ‘명부는 열지 않고, 중복만 찾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조가 끝난 암호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해당 정당에는 중복 가입 사실만 통보하되 어느 정당과 중복됐는지는 알리지 않는다.

임문영 의원은 “법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면서 정작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원명부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가입이 확인되더라도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법에 따른 당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영암서 ‘2026 코리아 월드 바이크 페스티벌’

광주특별시, 17~18일 개최…경주·가족 체험 다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국제·국내 모터사이클 경주와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2026 코리아 월드 바이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모터사이클연맹 아시아(FIM Asia)가 승인한 국제대회 ‘GP7 Asia Challenge 2026’과 국내 대회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AKRC)’이 함께 열린다. 국내의 정상급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GP7 Asia Challenge는 13~17세 유망 라이더가 동일 사양의 모터사이클로 경쟁하는 원메이크 방식의 대회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중국, 대만, 카타르, 태국 등 10개 국가·지역에서 유망 라이더 16명이 참가



AKRC(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주행장면.

할 예정이다.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에서는 주니어 레이스부터 국내 정상급 선수가 출전하는 1000cc급 고배기량 경기까지 다양한 모터사이클 경주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바이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바타가 마련한 ‘키즈 라이딩 스쿨’에서는 6~10세 어린이가 미니 바이크 주행을 체험할 수 있다.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형감각을 기르는 ‘키즈 밸런스 바이크’도 선보인다. 박정철 기자 holbul@

정진욱 “MASGA 활용해 조선산업 획기적 성장 이룰 때”

대기업·중소조선·기자재 기업 위한 ‘조선산업 특별법’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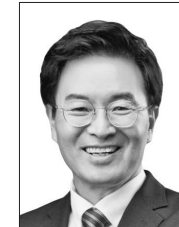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사진)은 14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함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스가(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친환경·자율운행선박, 인공 지능(AI) 기반 생산체계 전환 등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에 대응하고,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

업까지 아우르는 조선산업 전반의 종합적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진욱 의원은 “마스가(MASGA)가 대형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국내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에도 새로운 수주와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며 “대형 조선사와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조선박과 자율운행선박 등 개별 분야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돼 있지만, 중소조선과 기자재 산업, 인력·금융·공급망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선산업 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그간 관련 부처와 조선업계와의 의견을 수렴·협의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 법안은 조선산

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 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 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조선사의 수주를 실제 계약과 건조로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RG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보증한도·보증료율·심사기준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